

# 재난지원금 결국 증세로 돌아왔다...1년만에 감세 철회

### 소득세·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금융투자소득 과세 본격화 고소득자·대기업 등 세부담 늘어날 전망...일각 '핀셋 증세' 지적도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증세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정부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함에 따라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수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출까지 늘어나면서 '핀셋 증세'에 나선 것으로

풀어진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소득세 인상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압호화폐 과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등 증세안이 상당 부

분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대기업 감세카드를 꺼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정부의 세제 기조가 감세에서 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1년 만에 증세기조로 돌아선 것은 재정지출과 세수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총 14조3000억원에 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여과는 재정적자 확대를 이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77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5월 누계 국제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소비가 급감하면서 세수도 줄어든 것이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종 세제지원에 나서면서 세

수감소가 확대된 것도 증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권 말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우려해 보편적 증세가 아닌 일부 고소득층만 희생양을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번 증세가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을 겨냥한 보편적 증세가 아닌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분기의 근로소득이 상당 부분 줄어든 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굉장히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물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여파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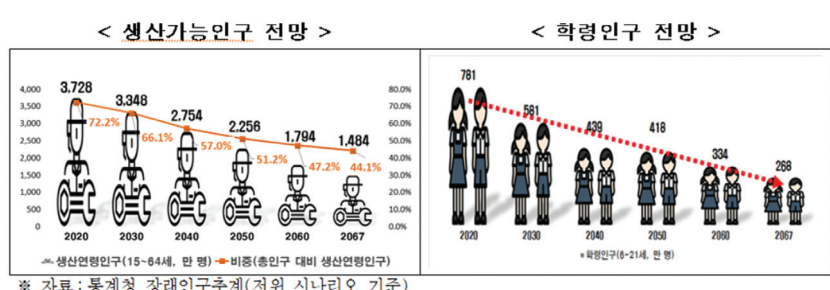
이어 "이에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과급영향이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지 않고 또 납세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증세 지적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을 보면 여러 가지 투자세율 감면이나 서민을 위한 감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같아 조세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며 "늘어나는 항목만 보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1

## '반토막 대한민국'...2060년 생산가능인구 현재의 48%

### 한경연 "현금보조확대하고 국공립취원을 높여야"



2060년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가 2020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씩 증가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2019년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정부 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통계청의 수치를 이용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인용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하여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대책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을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2015년 기준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인 50.9%를 상회하는 15개 국가들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립기관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21.9%)이 OECD 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나 기자



"여름휴가 먹거리 준비하세요" 22일 오전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바캉스 먹거리 할인전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삼겹살, 목살, 직화용기 간편식, 인주, 주류 등 다양한 바캉스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 "4박5일간 쏘렌토 타고 휴가 가세요"

기아차, 시승 이벤트 29일까지 응모 가능

기아자동차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4박5일간 쏘렌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승 이벤트 '바캉스 워드 쏘렌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8월7일~11일, 8월14일~18일 등 2개 차수로 운영된다.

차수별 75명씩 참여할 수 있으며 시승 모델은 디젤 40대, 하이브리드 35대다.

기아차는 이벤트 당첨자에게 무상 렌탈 기회와 함께 모바일 주유 상품권 5만원권,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달 29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31일 개별 통보된다.

## '안팔리는 우유' 원유가격 올해 동결...내년엔 ㄹ 당 21원 ↑

코로나19로 소비 위축 반영

우윳값 기준점이 되는 원유가격을 올리는 울리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내년에는 리터당 21원 인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유 소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 반영됐다.

22일 우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유가공협회와 낙농가들은 제8차 원유 기본가격 조정협상 위원회를 열고 올해는 동결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현재 우유회사가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받는 가격은 1/당 1034원이다. 낙농가는 생산비 증가를 고려해 약 20원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우유업계는 소비 감소에 생산



량 증가까지 겹치면서 가격인하를 주장했다.

업계에선 양측이 서로 양보한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탓에 학교 급식 관료가 막히면서 우유 소비가 크게 줄었다. 당장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유 가격은 오는 28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우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낙농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일단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위기 극복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 승용차 개소세 감면 올해 종료...전기차는 2년 연장

승용차를 새로 살 때,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덕에 올해 차를 바꾼 사람들이 많다.

이 제도는 더 연장되지 않고 올해 예정대로 일몰돼 없어진다. 반면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제도는 22년까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일몰돼 없어지거나 연장되는 등 적용 시기에 변동이 생기는 제도는 총 54개로 각각 종료 10개, 재설계 5개, 적용기한 연장 39개다.



차에 적용되던 것보다는 작은 수준이다. 감면되는 세금은 개소세가 5%, 교육세는 개소세의 30%가 감면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한대당 300만원이며 교육세 포함 390만원이다.

내년까지 정규직 전환할 경우 같은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완화한다. 이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낼 경우 공제액에 이자까지 쳐서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이런 행태는 일자리 안정화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추징금액을 조금 완화하기로 했다. 이자 없이 세액공제액만 반납하면 된다.

이외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농자녀가 증명하는 농지에 증여세를 깎아주는 제도도 2년 연장한다.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2년 연장한다.

일몰 연장되는 세금공제제도에는 대체로 중소·중견기업과 비정규직, 경단녀, 농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돼있다.

최이슬 기자

◇개소세 감면, 승용차 올해 종료 vs 전기차 2년 연장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더 연장되지 않고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는 올해 6월까지 70% 인하됐고, 7월부터는 30% 인하폭이 적용되고 있다. 이 덕분에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정부는 소비진작 정책효과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소세를 감면해주던 제도도 함께 일몰된다.

반면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폭은 승용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액공제 연장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일몰 예정이던 세액공제 39건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중 상당수는 '중소기업 지원'과 '취약층 지원'에 집중돼있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1년 더 연장됐다.

현행 제도는 2019년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인원 1명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씩으로 계산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2020년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이었던 직원을